

#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9.

|                    |    |
|--------------------|----|
| I. 일반개황 .....      | 1  |
| II. 경제동향 .....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 9  |
| IV. 국제신인도 .....    | 14 |
| V. 종합의견 .....      | 17 |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89천 km <sup>2</sup> | GDP     | 312억 달러 ('12)        |
| 인구   | 701만 명 ('12)        | 1인당 GDP | 4,870 달러 ('12)       |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통화단위    | Jordanian Dinar (JD) |
| 대외정책 | 친미노선                | 환율(달러당) | 0.71                 |

-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함.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생필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경기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면서 국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 즉위한 압둘라(Abdullah II Ibn Al-Hussein)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에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발 하였으나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며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지역 정치불안 및 내수 저조로 2~3%대 저성장 지속

- 요르단은 2007~09년 중 꾸준한 해외자본 유입, 주력 생산품인 가성칼리\* 및 인광석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5~6% 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수산화칼륨(KOH)의 관용명으로 주로 의약품, 액체비누 등의 원료로 쓰임.

-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외원조 및 FDI 유입이 감소하고, 관광 및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쳤으며, 2011년에도 중동민주화 시위로 인한 관광 산업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6%를 기록함.

- 2012년 FDI와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2.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2013년에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인프라 투자자금 지원(2016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 등 FDI 유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3.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세계 원유 매장량의 30%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음.

- 2013년 정부 예산 목록에 포함된 115개 프로젝트에 대한 GCC 자금 지원 규모는 9.3억 달러로,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는 동 자금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적부채 (2012년 기준 GDP 대비 공적부채 비율72.8%)와 각종 정부 보조금 및 국방, 치안 부문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반판매세 및 법인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5 %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재정지출 감소로 동 비율이 5.6%로 개선되었다가 2011년 정치개혁으로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6.8%로 악화되었음.
- 2012년에는 유류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수취액이 10년 내 최저치(GDP 대비 1.5%)를 기록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8.2%로 확대됨. 2013년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 밀가루 보조금 폐지, 전년도 말의 유류보조금 폐지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4.8%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연 4~5% 수준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유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0.7%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상품 가격의 상승,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5%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4%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유류보조금 폐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4.8%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공공요금 인상 및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2013 <sup>f</sup> |
|------------|------|------|------|-------------------|-------------------|
| 경제성장률      | 5.5  | 2.3  | 2.6  | 2.8               | 3.3               |
| 재정수지 / GDP | -8.5 | -5.6 | -6.8 | -8.2              | -4.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 5.0  | 4.4  | 4.8               | 5.9               |

자료: IMF.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제조업, 농업 기반이 약해 수입 의존적인 경제구조 형성

- 요르단은 인광석과 가성칼리 등 일부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
- 산업구조는 금융 및 부동산,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로 섬유, 비료,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식품 수요량의 87%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요르단 전체 수입의 14%에 달하는 규모임.

- 산업별 GDP 구성: 서비스업(66.8%), 제조업(30.1%), 농업(3.1%)

### 나. 성장 잠재력

#### □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내 물류 허브로 성장 가능

- 요르단은 홍해를 접하고 있는 아카바(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 지역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 신항 및 3개 대규모 터미널(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 곡물 터미널, 여객선 전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압둘라 국왕은 1999년 즉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전력, 석유, 운송 등 부문별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2003년 Arab Potash Company(국영 칼륨개발공사)의 매각(지분 52%), 2006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인광개발공사)의 매각(지분 37%), 2007년 Royal Jordanian(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
- 2008년에는 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JPRG)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해 음.

### □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 개방과 투자 유치를 강조하여 2000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 EFTA, 싱가포르, 아랍 17개국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고 2009년에는 이라크와 FTA를 체결하였음.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아카바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하는 등 투자 제한 완화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4년 9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최대치인 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연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FDI 유입액이 15억 달러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1분기 FDI 유입액이 6.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하면서 투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FDI(억 달러) : 26 (2007) → 28 (2008) → 24 (2009) → 17 (2010)  
→ 15 (2011) → 14 (2012)

#### □ 에너지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시행

-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60%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임 (현재 화석연료 비중 95%). 또한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하에 2015년까지 Wadi Rum 지역에 150~3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이상 투자될 GCC의 인프라 투자 지원금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며, 아카바 LNG 터미널 건설, 이라크-요르단 간 송유관 건설, 셰일오일 생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요르단의 에너지 수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유류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추진

-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공 요금을 인상하는 등 비인기성 정책을 시행하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유류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밀가루 보조금을 폐지하고 직접현금지원 방식으로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함. 현재 kg당 0.23달러인 빵 가격을 보조금 폐지 후 0.54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며, 보조금이 폐지되면 연간 약 1억 달러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정부는 기존에 전기요금을 전력생산 비용의 약 60%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2013년 8월 15일 정부 부처, 병원, 학교 등 일부 부문에 대해 전기요금을 5~10% 인상함. 엔수르 총리는 지난 6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2013년 중 7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12년 11월 공공지출 감소를 위한 주요 긴축정책으로 각료 인원 감축, 공공기관 채용기준 정비, 정부 부처 신규채용 보류, 독립 공공기관 예산 15% 감축 등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예산지출 삭감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함.

### 3. 대외거래

#### □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섬유, 가성칼리 등 주요 수출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 수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요르단은 에너지 수요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DP의 20%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또한 국내 식량 공급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함.
- 2010년 국제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7.1%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악화되고 중동 민주화 시위로 인해 관광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12.0%까지 확대됨.
- 2012년에는 유가 상승, 인광석 생산 및 수출 감소, 대외원조 수취액 급감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가 18%로 크게 확대됨. 2013년에는 걸프 연안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이 증가하고 관광수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1.3%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 단기외채잔액 비중 등 외채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

-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2년 76%에서 2012년 109%로 악화되었으며 FDI 유입 감소,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0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감소 추세임.



- 그러나 201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80억 달러)은 월평균 수입액의 4.4개월 분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DSR도 2012년 기준 4.4%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 2012년 8월 IMF는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 영향 등으로 침체된 요르단 경제의 안정을 위해 20.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을 승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7.8억 달러를 기 지급하였으며, 2013년 9월 3차 지급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IMF 사픽 부총재는 2013년 7월 요르단 재정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요르단이 경제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금융 및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함.

□ 미국과 대출보증협약 체결

- 요르단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과 대출보증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7년간 국채 12.5억 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2013 <sup>f</sup> |
|-------------|--------|--------|--------|-------------------|-------------------|
| 경 상 수 지     | -1,244 | -1,882 | -3,469 | -5,604            | -3,831            |
| 경상수지 / GDP  | -5.2   | -7.1   | -12.0  | -18.0             | -11.3             |
| 상 품 수 지     | -6,266 | -6,794 | -8,819 | -10,491           | -9,810            |
| 수 출         | 6,375  | 7,028  | 8,006  | 7,885             | 8,134             |
| 수 입         | 12,641 | 13,823 | 16,826 | 18,377            | 17,943            |
| 외 환 보 유 액   | 11,459 | 12,831 | 11,242 | 7,869             | 10,925            |
| 총 외 채 잔 액   | 14,569 | 17,129 | 17,643 | 18,907            | 22,238            |
| 총외채잔액 / GDP | 61.1   | 63.8   | 59.7   | 55.7              | 51.7              |
| D . S . R . | 4.0    | 3.6    | 4.1    | 4.4               | 4.3               |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압둘라 국왕에 대한 지지와 통치는 안정적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외교, 국방,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1999년 즉위한 압둘라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 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정치활동 및 언론의 자유 등 개혁을 추진하여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개혁 기조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 발표, 추진하고 있음.
  - National Agenda를 통해 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 노동법 등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걸쳐 향후 10년 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함.

##### □ 2011년 초 반정부 시위 발생 이후 국왕 주도의 정치 개혁 실시

- 2011년 1월 14일 이후 주말마다 수도 암만(Amman)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실업문제 해소,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평화시위가 전국에서 전개됨.
  - 정부가 평화시위를 보장하며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여 유혈 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3월 25일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로 처음으로 1명이 사망하고, 4월 15일에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국왕은 시위가 발생하자 2월 초 리파이 총리를 경질하고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국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패방지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신속히 대응함. 이에 더해 인접한 시리아에서 시위 사태가 격화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혼란이 심화되자 요르단의 반정부 시위는 추가 확대되지 않고 일단락됨.

## □ 시위 사태가 완화된 이후에도 정치불안 지속

- 정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1년 9월 30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이를 최종 확정함. 헌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독립된 선거위원회 설치 등 발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야권의 핵심 요구사항인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의회에서 총리 선출) 등은 배제됨.
- 또한, 야당은 의회 선거의 득표율이 실제 의석 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등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요르단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6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의원(150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 그러나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이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부족 대표)에 안배되어 있어 투표 결과가 의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정부는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수용해 1인 2표제(지역과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2012년 4월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야당의 핵심 요구가 배제된 점진적인 개정에 그침. 현재의 선거법에 의하면 하원 150석 중 108석은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부족 대표)이 점유하고 15석은 여성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27석만이 투표에 의해 결정됨.
- 2012년 10월, 국왕은 2011년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5번째 총리 경질 및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엔수르 총리를 임명하고 2013년 1월 총선 후 출범한 내각에서도 총리로 재임명함. 엔수르 내각은 각 정파의 정치참여 유도를 주요 강령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야당이 의회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총리의 요청을 즉각 거부하고 실제로 총선을 보이콧하는 등 제도권 내에 야당을 포함시키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
  - 최대 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기구) 등 야권은 개정 선거법에 대한 반발로 2013년 1월에 치러진 총선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제도권 외 정치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보조금 폐지 및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 2012년 11월 13일, 정부의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요르단민주국민당 등 5개 야당은 유류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며 참여 결정을 유보하였음.
- 유류보조금 폐지로 요르단의 유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최소 14%에서 최대 50%까지 급등하였음. 요르단에서는 지난 1989년과 1996년에도 유가 급등으로 인해 대규모 거리시위가 벌어진 바 있어 정부는 보조금 폐지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12월 28일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유가 상승 시위에서 구금된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과격한 수준은 아니나 생활고와 관련한 시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 주변국 난민 유입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의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유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 교육,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라크 전쟁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이라크 난민 50만여 명 중 30~40만 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이 급증하여 그 수가 자국민의 약 10%에 이름.

###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성과는 미미한 수준

-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금자에 대한 학대와 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한 조사 과정,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 사법절차 관여 등 문제점이 상존함.

- 연금, 사회보장, 상속, 노동, 이혼, 여행의 자유, 시민권,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명예살인의 경우 연간 20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여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이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으로,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

#### □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 간 갈등 상존

- 요르단 강 동안(East Bank)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왕과 군부-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
  - 왕족 일가(하심家)는 토착 요르단인들과 결탁하여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 옴.
-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난민 지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의 지지를 받아온 이슬람행동전선(IAF)은 1989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약 30%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으나, 이후 의석 비중이 감소하여 2007년 의회선거에서는 5.4%에 그쳤으며 2013년 1월 선거 참여를 거부함.
- 팔레스타인계와 토착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더디며, 국왕 주도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토착 요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 이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비롯한 무장조직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국제관계

#### □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교류 강화

-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6억 달러(경제지원 3.6억 달러, 군사지원 3억 달러)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에 3.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 연간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시리아 내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2013년 6월 요르단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에 투입됐던 700명의 병력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이와 관련된 인력과 장비 등을 철수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요르단 주둔 미군을 증강 배치함.
- 요르단은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은 여전히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중동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GCC 국가들은 요르단의 수니파 왕조를 지지하면서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3~16년 간 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함. 또한 요르단은 아랍 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기금(KFAED) 원조 수혜국으로 아즈락 고속도로 재건을 위해 2.4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음.
- 그러나 2011년 이슈화되었던 요르단의 GCC 가입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라크의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아카바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이 2013년 3월 승인되는 등 양국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 심화는 국경을 마주한 요르단에 난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요르단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르단의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가하는 등 반군을 지지하는 중동 및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여러 차례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고,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 조기상환 실시

-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 할인하여 조기상환(할인된 조기상환 금액 19억 달러)하는 데 합의 하였음.
  - 당시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요르단의 채무 규모는 43.8억 달러로 외채의 약 60%에 달함.
  - 이와 같은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2008년 중 채무액을 상환하였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신용평가 등급

- OECD는 2013년 1월 개최된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 지속, 관광객 축소, 대내외 정치상황 불안정 등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 미국, IMF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광수입 회복세 전환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 S&P는 요르단에 대한 해외원조 감소, 2011~12년 교역규모 축소 및 시리아 내전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근거로 2013년 5월 요르단의 국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이어서 2013년 6월 Moody's 도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요르단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1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함.
  - OECD: 5등급 (2012.3) → 5등급(2013.1)
  - S&P: BB(2012.7) → BB-(2013.5)
  - Moody's: Ba2(2012.2) → B1(2013.6)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5등급 (2013. 1.) | 5등급 (2011. 3.) |
| S&P     | BB- (2013. 5.) | BB (2012. 7.)  |
| Moody's | B1 (2013. 6.)  | Ba2 (2012. 7.) |

###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7. 26 (북한과는 1974. 7. 5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72), 문화협정(1977), 경제 및 기술협정(1977),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20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2004), 관광 협력협정(2005), 원자력협력협정(2008)
- 우리나라와의 2012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하여 14.6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약 14억 달러, 수입은 기타 석유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7천만 달러를 기록함.
- 최근 발전, 하수처리, 건설,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1월 한국전력(KEPCO)은 요르단 국영전력공사(NEPCO)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총 사업비 8억 달러 규모의 600MW급 IPP-3 디젤내연발전소의 건설운영사업자(Build-Own-Operate 방식)로 최종 선정되었음.
  - 2012년 2월 롯데건설은 요르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600MW급 디젤발전소를 5.6억 달러에 수주하였음.

<표 4> 한·요르단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 2010      | 2011      | 2012      | 주요품목                 |
|-----|-----------|-----------|-----------|----------------------|
| 수 출 | 1,226,220 | 1,224,002 | 1,395,546 |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
| 수 입 | 36,386    | 73,849    | 69,157    | 기타석유화학제품, 동제품, 알루미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요르단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FDI 유입 및 대외원조 감소, 2011년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 등으로 2010년 이후 2% 대의 저성장을 계속하였으며,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GCC 국가를 중심으로 한 FDI 유입 증가, 관광수입 회복으로 3~4% 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기관 개편, 보조금 폐지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11년 초 경제문제 해결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압둘라 국왕이 시위 발생 초기에 총리를 교체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국대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조기에 사태가 수습됨. 그러나 정치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정도가 미진해 야당은 의회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사회,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최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반면 총외채 잔액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다소 우려되나 IMF의 대기성 차관 지원, 낮은 DSR 비중, GDP 대비 총외채잔액 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